

민주당 2024년 예산안 국회심의 성과

- ① **윤석열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조원 증액**
 - R&D사업 0.6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0.3조,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이차보전 지원 0.55조, 새만금사업 0.3조, 청년미래세대 0.1조,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사업 388억 증액 등
- ② **불요불급하고 부실하게 설계된 예산 △4.2조원 감액**
 - 예비비 0.8조, ODA 0.2조 감액, 법무부와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일부 감액하여 투명하게 집행관리되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

민주당은 2024년 예산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윤석열정권이 편성한 비정한 예산을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정책사업을 증액하는 한편, 불요불급하고 부실하게 설계된 사업예산 4.2조원을 감액하는 성과를 냈다.

1. 윤석열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조원 증액

첫째,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대폭 감액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예산을 증액되도록 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되어, 젊은 신진 연구자의 고용 불안과 함께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의 차질, 고가의 연구장비의 장기간 사용불가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견되었으며 심지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꺼트려진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민주당은 개인기초연구(과기부) 619억원, 개인기초연구(교육부) 700억원, 집단연구지원(과기부) 233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교육부) 130억원 증액 등 신진연구자들의 도전의지가 지속되도록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이

온가속기 운영예산이 대폭 감액되어 장비를 6개월 이상 돌리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이온가속기를 비롯하여 슈퍼컴퓨터 등 대형장비 운영·구축 비용을 434억원 증액시켰다. 또한 달탐사, 차세대 모빌리티(K-UAM), 6G 차세대 통신 분야 등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기술개발사업 예산도 188억원 증액시켰다. 이를 반영한 R&D 사업 예산 증액 규모는 0.6조원 규모이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69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97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0억원,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16억원, 천원의 아침밥 5억원,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7억원,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3억원 증액 등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약 1천억원 증액되었다.

RE100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384억원, 수열에너지보급지원 사업 4억원 증액되었다.

둘째, 인플레이션,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중산서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민생사업**과 중소기업과 농업 지원 등 **경제 관련 사업**도 **대폭 증액**하였다.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원을 반영해 지역·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서민들 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냈다.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상분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 2,520억원,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대출 이차보전 감면 3,000억원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보하였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예산 85억원을 반영하여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경감드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민간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도 강화와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급식위생 관리지원금 108억원 증액, 온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이 추진되도록 부대의견에 명시하는 등 보육 관련 사업 예산도 증액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방지를 위한 사업예산도 15억원 증액되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 40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71억원,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사업 8억원, 발달장애인 돌봄종사자 사업 10억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23억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80억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13억원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예산도 100억원 증액되었고,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 예산은 288억원 증액되었다.

셋째,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는 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등도 증액되었다.

전라북도의 미래를 담보하는 새만금 사업예산도 정부안에서 대폭 줄어들었는데 고속도로 1,133억원, 신항만 1,190억원, 신공항 261억원, 지역간연결도로 116억원, 핵심광물 비축기지 187억원,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62억원, 수목원 100억원 등 0.3조원 증액되도록 하였다. 추가로 2024년 특별교부세 배분시 전라북도에 대해 200억원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하여 전라북도의 현안해결과 미래발전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해보다 감액된 한전공대 지원 예산도 33억원 증액되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점단 연장사업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명시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수행하는 독도 홍보, 일본 역사왜곡 대응 사업 예산이 10억원 증액하였고, 정부안에서 대폭 감액된 협동조합 활성화지원 8억원,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20억원 증액 등 사회적 기업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도 27억원 증액되었다.

2. 불요불급하고 부실하게 설계된 사업 예산 △4.2조원 감액

정부가 불요불급하거나 부실하게 설계된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하였으며, 불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일부를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조정하였다.

정부가 예비비를 5조원 편성하였는데, 코로나 이전에 예비비가 3조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여 △0.8조원 감액하였다. 수해국가가 내전 등의 상황으로 지원하기 어려움에도 반영되는 등 집행이 곤란한 ODA사업 예산은 0.2조원 감액하였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10%(8억원)와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중 1억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였다. 이외 정부가 예산편성을 부실하여 감액에 동의한 청년도약계좌 1,300억원, 국고채이자상환 1,500억원 등이 감액되었다.

민주당은 여당의 지난한 협상 대응 과정 속에서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하여 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과거를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성과를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에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2024년에도 민생을 최우선시 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국민께 다시 약속드린다.

2023. 12. 2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훈식